

러시아식 자유주의의 한계: 트럼프 등장 이후의 러시아 대외정책

정재원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재 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주도하에 반미/반서구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유시장경제 자체에 대한 반대는 커녕 정반대로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려는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 즉 세계자본주의체제 내 러시아의 위치와 역할의 한계 속 중심부 서구 국가들의 방해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국제정치경제질서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주도하지 못 하는 국가로서 극동과 시베리아 개발이나 아태지역과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더라도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거부하고 고립주의 혹은 자국우선주의와 같은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는 불가능하다. 또한 서구와의 대립 속에서 극동개발부를 신설하고, 중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석유가스의 수출을 비서구 지역으로 다변화하며,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하이조약기구 등 다양한 국제조직들을 통해 반서구적 입장을 강화하고 아시아중시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근본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러시아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무기로 당분간 서구와는 서로 (신)자유주의에 반하는 경향에 따라 움직이면서도 동시에 그 출구로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는 (신)자유주의 원칙하에서의 협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개발의 필요에 따라서는 서구 국가 자본들과도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러시아식 자유주의는 러시아와 유라시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상황에 따라 모순적인 두 가지의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금융이 아닌 실물 경제로의 자본의 흐름을 만들어 낼 것이 명확한데, 비록 이 지역 국가들이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개발과 발전의 담론들에 취약하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러한 시기에 한국은 보다 진보적이고 상생 가능한 독자적 접근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목 차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비판적 국제정치이론의 복권
 - 가. 주류 국제관계이론의 한계와 비판적 국제정치이론의 유용성
 - 나. 네오그람시안 국제정치경제학적 접근법에 근거한 국제관계 분석
 - 다.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세계자본주의체제로의 재편입과 (반)주변부화
2. 세계체제 내 러시아 자유주의의 발전의 특징과 한계
 - 가. 자유주의의 급진성과 필연적 변질, 그리고 모순적 공존
 - 나. 비서구/비중심부 체제전환기 국가들에서의 자유주의
 - 다. 러시아 자유주의와 국내/대외정치
3. 자유주의 패러다임적 접근의 한계
4. 대안적 지역협력의 모델 창출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비판적 국제정치이론의 복권

가. 주류 국제관계이론의 한계와 비판적 국제정치이론의 유용성

-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두 이론 공히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질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옹호하고 있으며, 미국과 서구 중심의 현존하는 국제질서를 옹호하는 경향을 보임.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정치경제적 변화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신현실주의적 국제정치이론에 따르면, 과거 소련과 달리 러시아는 자본주의 붕괴론과 같은 역사 필연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일정한 세력균형하에서 미국과 국가이익을 공유하고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신자유주의적 국제정치이론에 따르면, 러시아도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 적응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이 세력균형을 통한 역내질서 안정에 합의할 수 있고, 미국의 패권과 러시아의 도전이 갈등을 피하며 공존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서 기존의 주류 국제정치학 이론들로 설명되지 않는 현실들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주요 중심부 국가들에 의해 주도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등으로 인해 증폭되고 있는 전 지구적 불평등과 다양한 갈등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불가능함
- 따라서 현재 비판적 국제관계이론들에 대한 복권과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비판적 국제관계이론들은 국제세계의 분석에서 총체성을 고려하며 국제적 수준에서도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는 특징을 가짐
- 경제적 잉여의 수취 기제에서 정치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본주의체제의 역사적 특수성에 주목하는 비판적 국제관계이론에서는 총체성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볼 때 국제경제와 분리된 국제정치란 존재하지 않음
- 특히 비판적 국제정치이론들은 미국적 국제관계학의 인식론인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있는데, 상술했듯이 이러한 실증주의에 기반한 미국적 주류 국제관계학은 현실주의, 자유주의를 막론하고 미국의 세계 권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임
- 또한 비판적 국제정치이론들은 서구중심주의 혹은 오리엔탈리즘적 특징을 갖고 있는 주류 국제관계학이론에 대해 벗어나려는 시도를 통해 미국 및 서구 지배질서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취함

- 러시아를 비롯한 체제전환 국가들을 둘러싼 국제정치경제적 갈등을 분석해 보면 네오그람시주의나 세계체제론(Wallerstein 1979)과 같은 비판적 국제정치이론이 그 분석과 전망에 가장 적합한 틀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나. 네오그람시안 국제정치경제학적 접근법에 근거한 국제관계 분석

- 네오그람시안 국제정치경제학은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을 국제정치경제학에 확장 적용한 콕스(R. Cox)의 저작(Cox 1987)을 발전시키고 있는 일단의 국제정치경제학 연구자들로서 비엘러(A. Bieler), 모튼(A. Morton), 페일(K. van der Pijl) 등의 세계경제에 관한 최근 논의들을 가리킴
- 네오그람시안 국제정치경제학 이론은 세계질서는 헤게모니 국가가 나머지 국가들을 포섭하고 있는 형태로 국제정치경제의 질서를 설명하는데, 세계 헤게모니 질서를 해명하고 그것의 위기와 이동을 설명하는 이론임
- 네오그람시주의 국제정치경제학 이론은 기존의 국제관계학이나 국제정치경제학이 사회적·정치적 질서의 비역사적 현실 이해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 네오그람시주의 이론에 따르면, 생산을 둘러싼 집단들의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세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생산은 일종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며, 생산의 사회적 관계는 권력관계, 생산조직, 생산물 분배 등의 세 가지 차원에서 형성됨
 -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는 생산을 기초로 국가-사회 복합체가 구성되고, 특수한 국가 형태는 사회세력의 특수한 구성과 상이한 역사블록에 기초하는데, 이때 역사적 블록은 헤게모니 계급이 종속적 계급을 통합하여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세력을 형성함
 - 바로 이러한 헤게모니 개념을 국제정치경제적 관계로까지 확장하여 지배적인 사회계급이 형성한 국가적 헤게모니가 외부로 확대되어 세계 헤게모니를 구성하며 이 과정에서 초국적 헤게모니가 등장함
 - 한편 헤게모니 세계질서는 헤게모니 국가의 특수한 국가형태를 반영하는데, 그러한 국가 형태가 다른 국가에도 확산되어 세계적 차원의 수렴 현상이 일어남
 -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미국 헤게모니하에서 신자유주의적 국가의 등장은 필연적이고, 이 과정 속에서 초국적 역사적 블록이 형성되어 국민 국가의 경제선과 계급을 뛰어 넘어 이해관계와 정체성을 통합하여 초국적 자본의 헤게모니가 형성될 조건을 창출하게 되는데, 초국적 자본가계급 분파는 다양한 국제기구, 국제금융기구 등을 통해 자신의 계급적

*미국 헤게모니하에서
신자유주의적 국가의
등장은 필연적 ...,
이 과정 속에서
초국적 역사적
블록이 형성되어
국민 국가의
경제선과 계급을
뛰어 넘어 이해관계와
정체성을 통합하여
초국적 자본의
헤게모니가 형성*

체제 붕괴 이후
 중부와 동남부
 유럽의 옛 사회주의
 국가들 역시
 세계자본주의체제로
 재편입되는
 과정 속에 ...
 서구 금융으로의
 종속현상이
 두드러졌으며 ...

이익을 극대화하며 초국적 역사적 블록의 중심을 차지함

- 최근 비엘러와 모튼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의한 국가 성격의 변형과 민족자본과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 충돌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페일은 헤게모니 개념을 국민국가뿐 아니라 초민족적으로도 적용하여, 지구적으로 초민족 헤게모니 계급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들이 초민족기구들(IMF, 세계은행, OECD 등)뿐 아니라 사적 네트워크들(빌더버그 모임, 세계경제포럼, 삼각위원회 등)을 통해 지구적으로 헤게모니 블록을 형성하는 프로젝트를 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 외에도 중심부 지역 국가 주도의 세계자본주의체제 속에서의 체제전환기 국가들의 세계자본주의체제 내로의 재편입과 그 구조 속에서의 지위 재편과 역할 재규정, 그리고 내부 분화 등은 세계체제론과 같은 비판적 국제정치 이론에 입각한 접근법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 주고 있음

다.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세계자본주의체제로의 재편입과 (반)주변부화

- 위계적으로 나뉘어 있는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현실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된 이후 말 그대로 공식적으로도 공간적 확대를 완성하기에 이룸
 - 정치적으로는 동유럽 지역과 구소련 지역의 국가들이 확연하게 대조되는데, 구사회주의체제 국가들은 서구 중심부 국가들의 이해에 따라 시장을 매개로 한 철저한 분업구조가 형성되면서 중심-반주변-주변부로 변화, 분화되어 왔음
 - 체제 붕괴 이후 중부와 동남부 유럽의 옛 사회주의 국가들 역시 세계자본주의체제로 재편입되는 과정 속에서 과거의 지위를 상실하고, 다시 원료 공급지와 같은 반 주변부 혹은 주변부 국가의 위치로 강제되었음. 특히 금융세계화 시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서구 금융자본으로의 종속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그에 따라 국가자율성이 크게 제약됨
- 서구 자본에 대한 종속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1990년대 이후 자동차, 제조업, 전자제품 등 중동부 유럽의 주요 산업들은 해외 자본이 소유하게 되었음. 그러한 투자가 집중되는 산업은 경공업 분야로서, 서구의 초국적 기업 네트워크에 있어서 하청 관계에 입각한 초국적 노동 분업구조로 재편되었고, 사회주의 시절 발전했던 중공업 부문은 몰락하게 됨
 - 특히 국제금융자본은 IMF 등을 내세워 급격한 시장경제 도입은 물론 그를 위한 급진적인 구조조정을 강요했는데,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통한 기업의 사적 소유로의 전환은 자본시장과 노동시장 등을 창출하여 자신의 축적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금융자본은

사유화와 국제자본의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음

- 이 과정 속에서 서구 금융자본은 각국의 관료집단들과 결탁하여 사유화, 국제매입, 금융자금 도피 과정에서의 막대한 수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었음
- 한편 체제전환 국가들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자본을 조달받고 있는 등 은행이 기업의 최대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서구 금융자본들은 1990년대 심각한 경제적 혼란 속에서도 각 국가의 은행 부문에 적극적인 자본 참여를 확대했음
 - 그 결과 현재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에서 거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외국인 소유가 되었고, 해외 금융 자본의 유입을 일정 정도 통제해 온 러시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국인 소유 은행 숫자는 적은 편이지만, 그 대신 국내 타 은행들보다 몇 배나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중요한 것은 은행은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데, 금융자본이 체제전환 국가의 은행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자본이 체제전환 국가들의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중요한 대규모 기업들의 경우 외국자본이 최대 지분을 획득하였고, 핵심적 산업들이 초국적 자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됨
- 이러한 시각에 입각해 본다면, 사회주의 국제체제로부터 이탈하여 국민국가 형태로 복귀한 것처럼 보이는 과정은 한 국가 단위체의 자립화가 아니라 세계시장의 편입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들 국가에서의 신자유주의화, 즉 자유화, 사유화, 탈규제, 노동유연화 과정은 곧 불균등한 세계자본주의 경쟁질서로의 종속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반 주변부 혹은 주변부로 전락한 중동부 유럽 및 구소련 지역 국가들에 있어서 서구 자본에게는 선별된 자본, 지역, 계급의 발전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역내 국가들 간의 불균등한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고, 계급, 지역, 민족 등 수많은 단위에서의 갈등과 분쟁을 낳고 있음
 - 가령, 다른 세계 지역 곳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권위주의 독재 국가라 하더라도 서구 국가들에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경우 등 필요가 있을 경우 레짐 체인지에 나서지 않지만, 반대로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등 에너지가 빈약한 국가들의 경우 지정학적으로 필요할 경우 색깔혁명을 통해 레짐 체인지를 적극적으로 시도해 왔음
 - 이러한 자본주의체제의 확산 속에서 더욱 노골화된 신자유주의는 세계자본주의체제의 (반)주변부에 대한 중심부 자본의 지배 혹은 선택적

**사회주의
국제체제로부터
이탈하여 국민국가
형태로 복귀한 것처럼
보이는 과정은
한 국가 단위체의
자립화가 아니라
세계시장의 편입
형태로 나타났으며 ...**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민중들은
세계자본주의체제로의
재편입에 있어서
종속적 지위도
마다하지 않으며 ...
서구의 일원이되는
것이 러시아로의
종속보다 낫다고
판단**

편입을 더욱 강화하려 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음

-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유럽이라는 과거로의 복귀, 즉 비공산 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로의 복귀란 이제 무조건적으로 서구 경제에 의존했던 공산주의 시대 이전의 주변부 자본주의 구조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었음
 -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일부 국가들은 비교적 역동적으로 발전하여 유럽의 주변부로 편입되고, 다른 어떤 국가들은 세계 체제의 주변부 혹은 반주변부로 분화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지역을 막론하고 이들 지역의 후진성이 중심부의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변화할 것은 자명했음
 - 그러나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민중들은 세계자본주의체제로의 재편입에 있어서의 종속적 지위도 마다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면서, 설사 유럽 자본주의의 주변부가 되더라도 서구의 일원이 되는 것이 러시아로의 종속보다 낫다고 판단해 왔음
 - 가령, 중부 유럽 국가인 폴란드, 체코, 헝가리는 물론 역사적으로 유럽 역사의 주변부였던 크로아티아 등 구 유고슬라비아 구성 공화국들,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남부 유럽 국가들, 그리고 심지어 조지아,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구성 공화국들 중 일부 국가들까지도 유럽 중심부의 공해 산업 이전처, 저렴한 숙련 노동력 공급처, 자원 및 식량 제공처로 전략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유럽으로의 복귀를 진행해 옴
 - 따라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곧 유럽으로의 통합을 위한 적극적 개방을 의미하는데, 미국과 서구가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져올 파국적 측면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공산주의 정권하에서의 경험에 극도로 부정적인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지배계급들뿐 아니라, 민중들조차 시장경제 혹은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일정 정도 받아들임
 - 특히 좌파적 대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중심부 지역 국가들에 의해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안타깝게도 그 틀 속에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개혁 및 개방정책을 추구해 온 것임
- 정치적으로도 당시 서구 국가들 역시 신자유주의 국가로 변모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강제는 한층 더 자연스럽게 일어났는데, 유럽의 (반)주변부로의 편입을 적극적으로 선택한 중동부 유럽은 물론 구소련 지역을 작은 주변부로 삼은 러시아 역시 전 지구적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주변부 자본주의의 특징을 보이게 됨
- 이러한 주변부 신자유주의적 특징을 갖는 구조는 이 지역에서 현재까지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라는 이름

으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내부에 막대한 자원과 노동력, 그리고 시장을 포함하는 경제권이 미국 중심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형국 속에서 서구는 충돌을 불사하며 군사적·경제적·문화적으로 동진을 멈추지 않고 있음(Laruelle 2008)

2. 세계체제 내 러시아 자유주의의 발전의 특징과 한계

가. 자유주의의 급진성과 필연적 변질, 그리고 모순적 공존

- 16~18세기에 걸쳐 서구 유럽에서 형성된 자유주의는 시민혁명을 통해 절대군주제와 봉건적 신분제 사회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근거한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한 진보적이고 역동적인 정치사회사상이었음
 - 그러나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자유주의 사상은 경제적 자유주의, 즉 자유시장주의와 결합되면서 자유주의는 시장과 자본의 논리로 변질되었고, 결국 권력과 자본가들을 위한 수구적 이념으로 전락하게 됨
 - 경제적 자유주의로 변질된 고전적 자유주의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정부의 역할 등을 강조하는 사회적 자유주의 사상들도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자유주의를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부르며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의 한 토대가 되기도 함
- 그러나 이러한 진보적 자유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에 기반한 서구에서 경제 위기가 시작되었던 1970년대부터 경제적 자유주의는 다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미국과 영국 등에서의 신보수주의적 권력과 결합해 고전적 자유주의보다 한층 더 강한 시장근본주의적 자유주의, 즉 신자유주의가 지배적 사상으로 등장하게 됨
 - 미국과 영국에 의해 추동된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과 국가들에서 정치와 경제, 사회 전 영역에서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
 - 1990년대 말부터 확산해졌다는 일각에서의 주장인 ‘신자유주의 퇴조 현상’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유럽연합체제의 위기 및 극우정치세력의 득세, 그리고 미국국익우선주의를 내세운 미국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으로 한층 더 확산해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임
- 이론상으로는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기능을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내부에
막대한 자원과 노동력,
그리고 시장을
포함하는 경제권이
미국 중심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형국*

자유시장, 개방경제
등으로 상징되는
경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은
서구적이고
선진적이며 심지어
역사진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

극대화하는 사상이지만,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서 지배계급이 국가를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현실

- 아울러 학자들의 이론적 구분과는 달리, 자유주의는 실제 현실에서는 정치와 경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별도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님

나. 비서구/비중심부 체제전환기 국가들에서의 자유주의

- 전근대적 사회였던 비서구 비중심부 저발전 지역 국가들에서 자유주의는 식민지 시대는 물론 포스트 식민지 시대에도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음
 - 과거 공산당의 폭압적 지배로 인해 좌파적 대안이 왜곡되어진 이들 국가들에서는 자유주의적 의제들이 급진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아 자유주의적 단체들이 저항 세력의 주축을 이루기도 함
 -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특히 자유시장, 개방경제 등으로 상징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이념은 민중들에게 자연스럽게 서구적이고, 선진적이며, 심지어 역사진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음
- 체제전환 이후에도 지배정당의 역할에 더 익숙한 공산당 등 현실 사회주의 좌파 후신 세력들은 사회주의권 바깥에서 발달한 좌파적 의제들에는 물론 서구식 고전적 자유주의적 의제들에도 못 미치는 의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가령, ‘좌’의 이름으로 오랜 기간 억압적 지배에 익숙한 각국의 공산당 및 동유럽 및 구소련식 구좌파 세력들은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적으로 경도된 상황에서 권위주의에 무감각하고 서구에서 발달한 생태환경, 인권, 젠더, 소수자 문제 등에 대해 비판적임
 - 최근 유럽연합 질서에 이미 편입된 국가들은 물론 러시아 등지에서도 안티 파시즘 운동이나 환경 운동, 반독재 운동 등에 아나키스트 등을 포함한 서구식 좌파 세력들이 등장하는 등 새로운 흐름들도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급진적 자유주의와 서구식 사회(민주)주의, 아나키즘 등이 혼란스럽게 발전하고 있음
 - 가령 러시아 공산당과 같이 세계화 과정에서 중심부 국가와 자본이 러시아를 비롯한 중심부 외 지역에서 가하고 있는 불공평하고 부정적인 행위에 대한 분석은 날카롭지만, 자국의 안팎에서 자국에 의해 행해지는 유사하거나 더 잔혹한 행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무관심 혹은 아예 무지함
- 이러한 상황에서 서구에서는 (신)좌파의 운동 영역이었던 환경, 여성, 반핵, 인권 등의 문제가 러시아에서는 자유주의자들의 핵심의제로 나

타나고 있으며, 자유주의자들의 행동은 급진적 성격을 갖고 있음

- 최근 구소련식 극좌파가 아닌 다양한 서구식 신좌파 정치세력들도 세를 확장하고 있고, 서구식 무정부주의 운동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유주의적 경향이 강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긴밀한 연대는 잘 이루어지지 않음

- 권위주의 정부가 억압적인 통치를 행하고 있는 많은 비서구 (반)주변부 국가들에서는 종종 우파 민족주의 단체와 자유주의자들의 반독재 연합 혹은 우파 민족주의와 좌파 단체의 결합 등 서구 등 여타 선진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모순적인 연대도 이루어짐

- 2000년대 중후반 극심한 탄압을 받은 야당세력 연합 조직인 ‘다른 러시아’에는 열친 시기 관료가 주도하는 정치세력, 유럽연합 가입을 주장하는 우파 세력, 자유주의적 시민사회단체, 언론인들에서부터 ‘민족 불세비키’와 같은 민족주의적 극좌파 조직까지 매우 상호모순적 세력들이 망라되어 있었음

- 서구에서 수백 년 동안에 걸쳐 이루어진 일들이 압축적·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더하여 자본주의의 경험도 없고, 자유주의적 가치가 제대로 실험되지도 못한 채 사회주의체제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시장경제로 회귀하면서 여전히 자유 자본주의적 가치조차 제대로 완수되지 못한 단계에 있는 러시아의 특수한 현실에 대한 이해 없는 논의는 무의미함

- 비록 유럽을 지향하고, 미국을 찬양하며, 서구의 지원을 노골적으로 받거나 신자유주의, 극우 민족주의적 이념이나 근본주의적 종교, 그리고 특정 지배엘리트층 저항의 이데올로기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중의 저항이 일어나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Billington 2004; Casula 2009)

다. 러시아 자유주의와 국내/대외정치

- 사회주의 소련체제에 맞서 싸웠던 자유주의자들은 체제전환기에 접어들면서 민족주의적 경향과 서구식 경제적 자유주의(신자유주의)적 경향으로 분화되기 시작함

- 다양한 형태의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친서구적 경향과 동시에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구분이 불분명한 채 발전해 옴
-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극소수의 재벌을 비롯한 부유층이 자유주의의 이름으로 형성되었는데, 이들이 사유화 과정에서 국가의 부를 독점함으로써 분배 정의를 막고, 탈세 등 각종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됨에 따라 일반 대중들에게 자유주의는 곧 부패와 부도덕의 의미로 각인됨

*서구에서
수백 년 동안에 걸쳐
이루어진 일들이
압축적·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더하여 자본주의의
경험도 없고,
자유주의적 가치가
제대로 실험되지도
못한 채
사회주의체제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시장경제로
회귀하면서 여전히
자유 자본주의적
가치조차 제대로
완수되지 못한
단계에 있는
러시아의
특수한 현실*

**소위 색깔혁명 지원을
통한 반러/친미 혹은
친서구 정권 수립 및
탈러시아 시도는
러시아에게는 위협 ...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두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서구의 대 러시아
비판논리 속에서
러시아는 점차로
이러한 자유주의적
가치에 대해
강한 반발**

-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인권, 사상과 언론,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가치들이 자유주의의 표상처럼 여겨진 탓에 그 자체로는 큰 반감은 없었지만, 권위주의가 강화되고 서구와의 갈등이 증폭됨에 따라 이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가 곧 러시아에 위협을 가하는 서구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으로 왜곡됨
- 소련 붕괴 이후 1990년대 자유주의 추구를 선언했던 옐친 정부는 대외 정치적으로는 친서구적 개방정책과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시장 근본주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해 왔으나, 그 결과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서구 금융기구의 구조조정 강요와 그에 따른 심각한 사회경제적 후퇴였음
- 1996년 옐친의 재선 이후 극단적인 외부로부터 강제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거부했지만, 이미 러시아 사회는 자유화, 사유화, 거시경제 안정화, 노동유연화 정책 등이 관철되면서 신자유주의화 과정에 놓이게 되었음
- 점차로 국가가 자본을 통제하면서 개방정책에서 적극적 개입정책으로 선회하는 듯 보였던 대외경제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 역시 자유시장주의적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은 아니었음
- 2000년대 집권 초기 서구와의 관계 개선의 노력을 보였던 푸틴은 9.11 테러 이후 이라크 전쟁 이전까지 대외 정치경제관계에 있어서 기존 관료들에 비해 자유주의적 입장을 고수했었음
- 그러나 NATO의 동진과 EU의 확장 정책, 미국의 일방적 이라크 침공, MD 시스템 확대, 반러시아/친서구적 국제기구인 GUUAM 창설, 그리고 중앙아시아 석유가스를 확보하기 위한 소위 파이프라인 정치 등으로 인해 서구와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함
- 무엇보다도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구소련 국가들에서의 소위 ‘색깔혁명’ 지원을 통한 반러/친미 혹은 친서구 정권 수립 및 탈러시아화 시도는 러시아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옴
- 특히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두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서구의 대 러시아 비판논리 속에서 러시아는 점차로 이러한 자유주의적 가치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기 시작함
- 2000년대 초중반 이후 점차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적 요소가 약해지면서 권위주의적 특징을 띠기 시작했으며, 경제적으로도 옐친 2기보다 훨씬 더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를 주도하는 소위 ‘국가자본주의’적 특징이 나타나게 됨
- 이러한 정치, 경제적 후퇴로 인해 러시아 내 자유주의적 정치 사회 세

력들은 강한 비판을 해 왔는데,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원내에 진입하지 못한 자유주의 정당들의 영향력이 한층 더 약화되면서 비전형적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이 대중적 지지를 얻기 시작함

-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일부는 유럽적 가치나 자유시장, 그리고 서구 대 자본가나 자국의 올리가르히(Oligarch: 과두재벌세력)들과의 친화성을 부정하지 못하다 보니 대도시 지식인층 외에는 다수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해 온 측면도 큼
 - 결국 체제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자유주의는 마치 초기 자본주의체제에서와 유사한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경제적 자유주의가 야기하는 자본가와 부유층들만의 부 축적의 자유로 인해 매우 모순적인 지지와 비판을 받고 있음
- 정권의 탄압과 대중의 외면으로 인해 1990년대 중반 이후 우파 정치세력연합(SPS)이나 야블로코(Yabloko)로 상징되는 자유주의 정치 정당들은 원내 진출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되어 의미 있는 의회 내 정치세력으로 자리 잡지 못하게 되었음
 - 반면 자유주의 지식인들을 주축으로 하는 시민단체, 인권운동단체, 언론인, 인권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세력은 도시를 중심으로 꾸준한 지지를 받아 왔음
 - 여기에는 야블로코, 우파세력연합, 그리고 최근 파르나스(PARNAS)와 같은 정치단체에서부터 메모리알, 헬싱키 그룹, 노바야 가제타 지, 시민지원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들이 있음
 - 푸틴 2기 이후 부패 척결을 내세운 변호사인 세르게이 나발니(Sergei Nabal'nyi)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옐친 시기 총리이자 야당 지도자로 활동 중인 카시야노프가 주도하는 파르나스(PARNAS), 그리고 야블로코가 주요 자유주의 야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음(Hale 2004)
 - 대부분의 자유주의 세력들은 애국주의의 광풍 속에서도 크림 반도의 합병과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등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해 왔음
 - 강고한 권위주의 국가에서 자유주의자들은 푸틴 1기에 강력한 존재였던 ‘다른 러시아(Another Russia)’와 같이 일부 극좌파들과 민족주의 세력들까지 결합한 반정부조직을 지속적으로 구성해 왔으나, 내부 이견 등으로 효과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음
 - 많은 실패와 반목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민주연맹’, ‘우파활동당’

*체제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자유주의는 마치
초기 자본주의
체제에서와 유사한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경제적 자유주의가
야기하는 자본가와
부유층들만의
부 축적의 자유로 인해
매우 모순적인 지지와
비판을 받고 ...*

푸틴을 옹호하는**'권력정당'(party of power)' 이****민족주의와 사회주의,****그리고 자유주의적****의제들 중****대중영합적인****요소들을 종합하여****탄력적으로****다양한 입장들을****도입, 선점함으로써****2000년대 이후에는****대중적 지지를 받게****되었다**

등 다양한 자유주의세력들은 민족주의자들 및 좌파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정치세력들을 규합하여 반푸틴 전선으로 결합하여 반정부운동을 벌이기도 함

- 주목해야 하는 점은 푸틴을 옹호하는 그러나 대통령은 당에 속해 있지 않아 여당은 아닌 '권력 정당(party of power)'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적 의제들 중 대중영합적인 요소들을 종합화하여 탄력적으로 다양한 입장들을 도입, 선점함으로써 2000년대 이후에는 대중적 지지를 받게 되었다는 점임
 - 일반적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 자본주의체제를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라고 칭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반하는 정책인 양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에서는 신자유주의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관철되고 있음을 간과한 주장임
 - 특히 비서구, 비중심부 지역 국가들 및 체제전환기 국가들의 경우 거의 예외 없이 국제금융기구들과 중심부 국가 및 자본의 압박하에 외부로부터의 강제된 신자유주의화가 진행되어 왔고, 부분적 갈등과 조정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강한 권위주의적 국가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왔다는 특징이 있음
 - 엘친 초기의 신자유주의식 급진 개혁정책 기조로 인해 사회는 이미 엄청난 변화를 겪었으며, 이후 자본에 대한 국가의 우위를 보였던 푸틴 정권 시기에도 분배적 측면이나 노동과 사회복지 영역 등 사회경제적 영역에서는 민영화나 시장화, 유연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러시아는 국내적으로도 명백하게 주변부적 국가 신자유주의(state neoliberalism)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음
- 그동안 러시아를 포함한 구소련 국가들에서의 변화에 대해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체제의 전환과는 유리되어 있는 체제전환기적 특성을 갖는 현상으로 간주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임
 - 또한 중국과 더불어 국제정치무대에서 서구와의 대립을 주도하는 주요 행위자인 것처럼 보여 온 러시아의 정치, 군사적 행보로 인해 세계 자본주의체제로의 재편입과 그에 따른 역할의 강제 등에 따른 분석이 부족했음
 - 나아가 최근의 자본주의의 전환(transformation)과의 접합성 속에서의 분석, 특히 신자유주의와 금융세계화, 저성장시대라는 국제정치경제적 변화와의 연관성 속에서 나타난 러시아의 국내의 정치를 살펴보는 비판적 국제정치학적 관점이 필요함

3. 자유주의 패러다임적 접근의 한계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무장한 세계화 등으로 표현되며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지배해 왔던 기본 원리는 자본이 아닌 국가가 우위에 서서 국가주의나 민족주의, 보호무역주의 등을 내세우며 마치 (신)자유주의적 질서나 시장근본주의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원리에 입각한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 오지는 않음
 - 유럽에서 시작되어 미국 트럼프 집권으로 강화된 고립주의, 자국우선주의, 반신자유주의 노선의 천명으로 자유주의와 다자주의의 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표면적인 변화에 불과함
 - 더욱이 그러한 근본적 변화의 상징으로 보이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급작스러운 대 러시아 친화정책 역시 근본적인 질적 변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음
 - 결론코 미국은 그 어느 정당의 집권하에서도 그 어떤 대통령의 통치하에서도 러시아와 밀월관계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1972년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닉슨의 중국 방문 전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친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훗날에는 정반대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소련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한 적이 있었음
 - 공통의 적에 맞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동맹을 포함해 역사적으로 미국은 자신의 단일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상하는 새로운 패권 경쟁 대상 국가들을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게 만드는 전략하에서 행동해 왔으며, 현재 러시아에 대한 접근 역시 그러한 일관된 기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음
 - 미국은 같은 중심부로서 큰 틀에서는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유럽은 허용할 수 있으나, 중국의 패권 도전을 강하게 억압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 외의 또 다른 패권 국가가 등장하는 것은 절대로 용인할 수가 없음
 - 특히 유라시아 연합을 구성하며 역내에 자체적으로 막대한 자원과 시장, 중요한 지정학적·지경학적 입지, 그리고 저임금 숙련 노동력을 보유한 유라시아 연합을 주도하는 러시아라는 또 다른 패권 도전 국가의 등장과 도전은 미국으로서는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음(Emre 2004; Akgul 2005; Laruelle 2008)
 - 흥미로운 점은 미국은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상호보완적 관계로 얽혀 있어 물리적 충돌은 자제하는 데 비해, 경제적 관계가 약한 러시아와는 간접적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급작스러운
대 러시아 친화정책
역시 근본적인
질적 변화와는
거리가 멀다**

중심부 서구**국가들의 방해****넘어 도약하기****위해서는 ...****다양한****국제조직들을 통해****반서구적 입장을****강화하고****아시아중시정책을****펼치는 것처럼****보이지만, 이는****근본적 패러다임의****변화를 의미하는****것은 아님**

- 일시적 친러시아정책으로 미국은 현 국면에서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 중국의 힘을 속으로는 크게 두려워하는 러시아를 부추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EU 견제 및 통제, IS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동은 물론 수니파·시아파를 막론하고 세계 곳곳에서의 이슬람 세력에 대한 약화를 위해서도 러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있는 것임
 - 따라서 중동에서의 IS 사태의 해결, 궁극적으로는 이슬람 세력의 확장 저지라는 목표는 단기간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서로의 협력 관계는 일정 부분 지속될 것임
 -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종결시키는 등 러시아의 급격한 부상을 방조하지는 않을 것이며, 기존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영향력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 세계 여러 지역들에서의 갈등은 머지않아 다시 재현될 것으로 판단됨
- 러시아는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서구와 대아시아정책을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주도하에 대외적으로는 반미/반서구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정치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거부하거나 경제체제로서 자유시장경제나 자본주의체제 자체에 대한 반대는 커녕 정반대로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려는 모습에 주목해야 함(Weigle 2000)
 - 즉 세계자본주의체제 내 러시아의 위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심부 서구 국가들의 방해로 넘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국제정치경제질서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서구와의 대립 속에서 대내적으로는 극동개발부를 신설하고,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석유가스의 수출을 비서구지역으로 다변화하며,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하이조약기구 등 다양한 국제조직들을 통해 반서구적 입장을 강화하고 아시아중시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근본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Petrov 2005; Senderov 2009)
 - 또한 러시아는 후발 국가로서 자유주의적 정치경제적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국가 주도적 자본주의의 불가피성과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임
 - 이는 역대 경제 관련 장관들의 퇴임 후 반정부 노선 참여와 2016년 올류카예프(Ulyukaev) 경제부장관 구속에서도 보여지듯 권위주의적 권력 내에서도 자유주의적 성향의 경제부처 관료들과의 부단한 노선투쟁 및 권력투쟁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임

- 국내 정치에서의 자유주의적 입장에 근거한 푸틴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러시아 자유주의 정치 및 경제 엘리트들의 고질적 병폐인 부패 등의 혐의로 처내되, 동시에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대외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러시아 대외정책의 특징이기도 함
- 즉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주도하는 국가가 아닌 러시아로서는 극동과 시베리아 등 지역들의 개발이나 아태 지역과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강대국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에 매진. 다만, 이를 국가가 주도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자유주의적 질서를 거부하고 고립주의 혹은 자국우선주의와 같은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는 불가능함

4. 대안적 지역협력의 모델 창출

- 향후 러시아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무기로 당분간 대립구도에 있는 서구와는 자유주의에 반하는 세계적 경향에 따라 움직이면서도 동시에 그 출구로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는 자유주의 원칙하에서의 협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음
- 즉 미국과 유럽에서의 반러시아적 경향과 더불어 최근의 고립주의, 자국우선주의, 민족주의적 경향에 따라 러시아는 불가피하게 유사한 기초하 자유주의에 반하는 정책을 취하겠지만, 아시아는 물론 유라시아 지역, 나아가 역외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에서도 개발의 필요에 따라서는 서구 국가 자본들과도 적극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러시아식 자유주의는 러시아와 유라시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상황에 따라 얼핏 모순적인 두 가지의 정책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임
- 결론적으로 서구 국가들과도 대립 일변도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간극을 이용하거나 같은 서구 국가들 내에서도 국가별로 차별적인 대응을 통해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적 질서를 거부하지 않으면서 화해를 모색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극동 지역이 한층 더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는 새로운 대안 지역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난 동방경제포럼에서 한국과 러시아 정상 간 회담이 개최됨
- 이 회담에서 한·유라시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가스관과 전력망,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등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에 대한 협의 채널 재개 및 공동연구 수행 합의, 극동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주도하는 국가가 아닌 러시아로서는 극동과 시베리아 등 지역들의 개발이나 아태 지역과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강대국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에 매진. ... 다만 이를 국가가 주도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자유주의적 질서를 거부하고 고립주의 혹은 자국우선주의와 같은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는 불가능

**아시아나
유라시아 지역으로
러시아 정치의 중심이
이동하는 등의
근본적 변화는
없을 것**

지역 인프라 사업 등에 3년간 20억 달러 규모의 극동 금융 이니셔티브 신설

- 특히 한·러 전력망 사업에 대한 사전 공동연구에 합의하고, 일본이 주도하는 몽골에서의 슈퍼 그리드 사업을 예시로, 몽골과 중국, 러시아를 잇는 전력망 건설을 강조함
- 그 외에도 이노프롬-2018 파트너국 참여,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구축, 동방경제포럼 행사 주관, 극동 금융협력 등 4개 양해각서(MOU)와 1개 협정 개정안에 합의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둠
-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도발로 인해 동북아 공영발전을 위한 다양한 남-북-러 공동사업이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해 온 기존의 대러시아외교정책의 기초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 또한 한국과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극동개발에 나설 경우 기존의 자국의 경제이익 중심 개발정책에서 벗어나 현지 주민의 삶의 터전과 환경을 보전하고 그들의 인권과 생존권과 복지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공존공영, 평화복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함
- 따라서 가스관이든 전력망이든 철도 연결 사업이든 간에 주변부에게 강요하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위계적 개발 모델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개발협력의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일시적인 러시아의 아시아 중시정책에 근거한 경제협력 구조를 공고히 해야 함. 우리 정부는 향후 러시아의 정책 기초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틀을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많은 학자들의 희망과는 달리,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서구와의 관계 중심적 외교정책에서 벗어나고자 한 적이 없으며, 극동을 비롯한 아시아로의 근본적 외교정책 기초 변화를 도모한 적이 없음
 - 서구와의 관계 악화의 이유 외에도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발전 전망이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러시아 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으로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으나, 아시아나 유라시아 지역으로 러시아 정치의 중심이 이동하는 등의 근본적 변화는 없을 것임
-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정책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 구상이 상호 충돌할 가능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국가가 주도하는 구상들로부터 발생하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장점들이 서구 자본의 입장

에서는 일정 정도의 협력의 공간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나타날 것임(Hunter 2004; Akgul 2005; Laruelle 2008).

- 따라서 구소련 유라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금융이 아닌 실물 경제로의 자본의 흐름을 만들어 낼 것이 명확한데, 비록 이 지역 국가들이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개발과 발전 담론들에 취약하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러한 시기에 한국은 보다 진보적이고 상생 가능한 독자적 접근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음
- 추상적인 다자협력 혹은 소지역주의 등의 개념보다는 그동안 국가 간 관계에서 간과되어 온 부분들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를 위해 그동안 러시아를 자원 다변화의 한 대상 국가로만 인식하거나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만 여겨왔던 기존의 대러시아정책 기초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정상적인 양국 간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기업 단위의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한 한국 기업의 문제인 한국 기업들의 현지 문화, 노동 조건, 노동자 무시 경향, 한국식 접대 문화 및 현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성범죄 발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북방경제협력에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이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복리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해당 지역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에너지 개발을 추구하며, 해당 지역을 넘어 타 러시아 지역에서도 서구의 기준 이상의 인권과 복지에 기반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국 측 당사자들의 근본적인 의식 개조가 필요함
- 또한 현 정부에서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령 수퍼 그리드 사업과 같이 이러한 기초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신재생 에너지 중심 수출 구조가 빈약한 현재의 러시아에게 있어서는 자국 국민의 복리가 아닌 수출을 위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환경파괴 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

**북방경제협력에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이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복리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해당 지역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에너지 개발을 추구**

참고문헌

- Akgul, Ersal. 2005. "Russian Foreign Policy and The Discourse of Eurasianism Rhetoric versus Reality." *A Thesis Submitted to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Sciences of 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
- Billington, James H. 2004. *Russia in Search of Itself*.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Boquerat, Gilles, and Frederic Grare. 2004. *India, China, Russia: Intricacies of an Asian Triangle*. Singapore: Marshall Cavendish Academic.
- Casula, Philipp, and Jeronim Perovic (eds.). 2009. *Identity and Politics During the*

- Putin Presidency: The Foundations of Russia's Stability.* Stuttgart: Verlag.
- Clunan, Anne L. 2009. *The Social Construction of Russia's Resurgence: Aspiration, Identity, and Security Interest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Cox, R. 1987. *Production, Power and World Order: Social Forces in the Making of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Davies, Howard, and D. Green. 2008. *Global Financial Regulation.* Cambridge: Polity.
- Erşen, Emre. 2004. "Neo-Eurasianism and Putin's 'Multipolarism' in Russian Foreign Policy." *Turkish Review of Eurasian Studies*, vol.4.
- Franklin, Simon, and Emma Widdis (eds.). 2004. *National Identity in Russian Culture: An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Gel'man, Vladimir, & Cameron Ross. 2010. *The Politics of Sub-National Authoritarianism in Russia.* Burlington: Ashgate Publishing Company.
- Gill, Stephen. 1991. *American Hegemony and the Trilateral Commis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ll, Stephen (ed.). 1993. *Gramsci, Historical Material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le, Henry. E. 2004. "Yabloko and the Challenge of Building a Liberal Party in Russia." *Europe-Asia Studies*, vol.56, no.7.
- Hunter, Shireen (ed.). 2004. *Strategic Development in Eurasia After 11 September.* London: Frank Cass & Co.
- Ivanov, I. S. 2001. "The New Russian Identity." *The Washington Quarterly*, vol.24, no.3.
- Jackson, Nicole J. 2003. *Russian Foreign Policy and The CIS: Theories, Debates and Actions.* London: Routledge.
- Kassianova, Alla. 2001. "Russia: Still Open to the West? Evolution of the State Identity in the Foreign Policy and Security Discourse." *Europe-Asia Studies*, vol.53, no.6.
- Kegley, Jr., and W. Charles. 2001. *World Politics, Trend and Transformation.* Boston: Wadsworth.
- Kuchins, Andrew C., and Igor A. Zevelev. 2012. "Russian Foreign Policy: Continuity in Change." *The Washington Quarterly*, vol.35, no.1.
- Laruelle, Marlene. 2008. *Russian Eurasianism: An Ideology of Empir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 Laruelle, Marlene (ed.). 2009. *Russian Nationalism and the National Reassertion of Russia.* London: Routledge.
- Light, Margot. 2003. "In Search of an Identity: Russian Foreign Policy and the End of Ideology."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and Transition Politics*, vol.19, no.3.
- Lipman, Maria, and Alexey Malashenko. 2013. "The End of An Era in EU-Russia Relations." Carnegie Moscow Center.

- Panfilov, Oleg. 2005. *Putin and The Press: The Revival of Soviet-style Propaganda*. London: The Foreign Policy Centre.
- Petrov, Nikolai. 2005. "From Managed Democracy to Sovereign Democracy, Putin's Regime Evolution in 2005." *PONARS Policy Memo*, no.396.
- Polikkovskaya, Anna. 2004. *Putin's Russia*. London: Harvill Press.
- Reich, Robert. 1989. *The Resurgent Liberal*. New York: Vintage Books.
- Senderov, Valerii. 2009. "Neo-Eurasianism: Realities, Dangers, Prospects." *Russian Politics and Law*, vol.47, no.1.
- Shirayev, Eric. 2010. *Russian Government and Politics*. Palgrave Macmillan: New York.
- Trubetzkoy, N. S. 1991. "The Russian Problem." *The Legacy of Ghengis Khan and other Essays on Russia's Identity*. Ann Arbor: Michigan Slavic Publication.
- Wallerstein, Immanuel. 1979.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tz, Kenneth N. 2001.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 Weigle, Marcia. 2000. *A. Russia's Liberal Project: State-Society Relations in the Transition from Communism*. Pennsylvania: Pennsylvania University Press.

❖ 저자 약력

■ 정재원

現,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 유라시아학과, 조교수.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사회학연구소 사회학 박사. 주요 저서로 『러시아 제국과 소비에트: 이념, 종교, 혁명』(공저, 2013), 『현대 러시아의 해부』(공저, 2014), 『5.18 민주화 운동의 국제적 비교와 시민의식』(공저, 2014),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공저, 2015), 『카프카스 역사와 지정학: 전쟁, 분쟁, 그리고 이념』(공저, 2016) 등이, 옮긴 책으로 『러시아를 움직이는 힘』(공역, 2013), 『뉴 레프트 리뷰』(공역, 2010; 2015) 등이 있음. 주요 논문으로, "비중심부 식민지 민족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의 혼재와 사회주의로의 진화: 중앙아시아에서의 타타르 개혁 운동의 탄생과 종말", "중부·동남부 유럽 탈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사회민주주의 정치체력의 발전과 분화", "러시아 시민사회의 변화: 신 자유주의 세계경제와 권위주의 국가와의 관계", "러시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세계 자본주의체제와 국가 신자유주의의 영향", "중앙아시아, 신장 그리고 위구르 문제: 기회와 위기의 모순적 공존", "주변부 이슬람 사회의 진보적 민족주의: 아제르바이잔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적 의의", "타지키스탄 내전과 그 이후: 민족주의, 이슬람, 그리고 민주주의", "러시아 극동 지방으로의 중국인 이주: 역사와 현황" 등 다수.

기획 및 감수: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장)

편집: 황지나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5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